



강기정광주시장차담회

사진=광주시청제공

## 강기정 광주시장 “통합 대원칙은 시·도민 불이익 배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시민·공무원 불이익 배제를 첫 손에 꼽았다.

또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5개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제안했고, 정체성 차원에서 ‘광주정신’을 특별법에 담아 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집중 배치 가능성을 재확인했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 광역의원 정수, 통합의회 청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시장은 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이냐’ 일부 우려에 대해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도민을 고려해 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중전에 누리던 행·재정상 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통합 특별법에 제도적 장치 마련”  
 폭넓은 경청 위해 5개 기관 합동공청회·직능별 공청회 제안  
 “공공기관 집중... 명칭·의원정수·청사 등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

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안된다”는 조항을 뒤 시·도민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약속했다.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등을 감안해 4급 이상 고위직은 예외적으로 타 지역 근무 가능성을 열어줬다.

14일 국회에서는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양 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또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민화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의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역별 5개 기관(시·시의회·자치구·구의회·교육청) 합동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원 정수가 원칙이고, 주민투표는 필수 의무사항(강행규정)이 아니라 ‘선택적 절차’라는 유권해석도 제시했다.

광주 정체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에도 민주·인권·정의·

평화를 골자로 한 ‘광주정신’을 특별법 목적과 세부 조항에 반영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체계와 관련해서도 “행정구역 개편과 무관하게 광주는 ‘생활권’ 단위로 지속되고, 관련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정책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이 통합 시 공공기관을 광주·전남 권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지원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 명칭은 현재로서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로 합의한 상태고 하위 행정단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현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법 등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통합의회 분회의장 등 물리적 공간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 해법은 있다”고만 언급했다. /기동취재부

시도지사교육감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4자 회동 무산됐다. ‘교육통합’ 충분한 공론화 위해 재성사 시·도지사 국회 행사 끝난 직후 서울에서 만날 듯 특별법에 교육계 우려 불식할 해법 담길지 ‘주목’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오는 6·3지방선거 통합 선출직 대상인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특별법 발의를 이틀 앞두고 첫 4자 회동을 한다.

13일 광주시와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4자 회동은 촉박한 일정 조율 문제로 무산될 뻔했으나,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화두 중 하나인 ‘교육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재성사됐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긴밀히 조율 중이지만, 14일 오후 4시 서울 모처가 유력하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열리는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신년 교류의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가 끝나는 오후 4시 전후로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통합’은 교사·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승진 등을 놓고 일선의 걱정 섞인 반발이 제기되는 만큼 행정통합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4자 회동에서는 시도 교육청 합의 내용과 교육계 일각의 우려 등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전남 시·도 교육청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원론적인 통합 당위성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장흥 물축제, ‘전남이 선택한 1위’ 대표축제 최우수 선정

여름 대표 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인정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는 시군에서 제출한 21개 축제를 현장평가 50%와 축제심의위원회 서면 및 발표 평가 50%를 합산해 선정한다.

지난 8월 열린 축제심의위원회는 축제·관광·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관광객 유치 가능성 ▲콘텐츠 완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도심에 흐르는 탐진강을 활용해 참여형 물놀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태국 ‘송크란 축제’와 이탈리아 ‘베니스 축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염선호 기자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철저한 안전관리, 야간 체류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뚜렷하다는 호평도 받았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5일부터 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19회 물축제는 태국 송크란 축제와 교류를 이어 나가며 하루 종일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 플레이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기존 프로그램은 고도화하여 글로벌 축제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K-팝 공연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전라남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여름축제로 지속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제54회

# 강진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